정병석의 경제멘토링

헨리 포드의 결단에서 배우는 것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 헨리 포드는 1914년 1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단행한다. 포드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을 2.32달러에서 5달러로 두 배 이상 인상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미국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임금의 3배 이상 되는 수준이고 지금 가치로도 일당 120달러에 상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포드는 왜 이런 파격적 결단을 내렸는가?

포드의 결단은 당시 너무도 획기적인 것이었고 일부 언론은 이런 파격적인 임금인상은 '경제적 범죄행위'라거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포드의 혁명적 임금인상 결단은 결과적으로 기업경영 차원에서도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포드 근로자들의 사기가 크게 오르고 이직률이 획기적으로 줄면서 생산성이 대폭 오르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이 대폭 오르면서 그들이 바로 포드 자동차의 유력한 구매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미국의 생산직 근로자가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기폭제가 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1970~80년대에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근로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실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당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낮았지만, 기업 내에서 사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 관리자와 근로자간의 격차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매년 임금인상을 할 때 임금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임금수준이 높은 관리직들은 적게 올리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하후상박원칙에 의한 임금조정이나 불합리한 임금격차의 축소 등을 강력히 기업에 강력히 촉구했고 기업도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최대한 협력했다. 최저임금제가 1988년에 시행되기 전에도 저임금 해소를 위한 사회적인 장치가 가동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사회의 자율화·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하후상박 원칙이나 임금격차 축소 등의 임금정책이 실종되어 버렸다. 이제 정부를 비롯하여 아무도 그러한 원칙을 주장하지 않고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임금을 조정한다.

이런 보수관행이 선진적인 기업경영 행태로 미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기업 CEO에게 파격적인 스톡 옵션이나 성과급을 지급한다. 증권과 은행의 일부 선택된 영업직에게 성과급으로만 몇 억, 몇 십억 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 결과는 엄청난 소득격차의 확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통계청 조사로 600만 명이 넘어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수준이 넘는다.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확대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정규직 임금의 60% 미만을 받는 경우도 많고 4대 사회보험도 적용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원래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게 된 것은 IMF외환 위기 후 고용의 유연성이 문제가 되면서부터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대규모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나서 기업들은 업무공백이나 추가 업무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결하려 했다. 이 때의 기업논리는 주문량 변동에 따라 신속히 고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즉 고용의 유연성을 위한 것이지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났고 임금격차도 확대되어만 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이제는 이것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등장했다.

기업이나 근로자나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해서는 정작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한다. 사회는 더불어 살 때 자기의 이익도 극대화된다는 것을 포드는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포드식의 임금조정으로 미국경제를 회복시키자는 논의가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 침체의 원인을 소득양극화와 중산층 축소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여 광범위한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제품의 소비를 늘려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포드의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임금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정규직과 똑 같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오히려 고용기간이 짧고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한 것을 감안하여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맞다. 그렇게만 되면 기업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문제도 해소되고 과도한 격차도 시정되어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을 포함한 각 후보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어기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기업가라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대폭 현실화하여 생산성 향상 등의 다목적 효과를 기하는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이외에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적절한 보조를 하는 것 등은 정부의 역할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격차 해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양대 석좌교수〉

사설

박근혜 당선인 진정성 보인 인수위 인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새누리당 공동선대 위원장을 지낸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등 1차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고, 새로운 제3의 '깜짝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박 당선인이 호남 인사들을 다수 인수위에 포진시킨 것은 탕평인사를 통해 국민대통합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선 원칙은 향후 내각과 청와대 진용 구축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고무적이다.

우선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정책위 의장은 전북 고창이 본적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전북 전주 출신이고, 동교동계인 김경재 수석부위원장은 여수에서 태어났다.

'파란 눈'의 이국적 외모에,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요한 부위원장은 순천 태생이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인 인 부위원장은 자신이 쓴 책 제목이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호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청년특위 위원인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모두 전북 출신인데다 목포대에서 약 3년간 겸임교수로 활동해 준(準) 호남 출신으로 분류된다.

우리는 이번 1차 인수위 인선부터 박 당선인이 제시한 인사대탕평의 원칙에 의거, 지역적 안배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실 인수위의 역할은 업무인수, 새 정권의 준비 작업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25명의 인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인선을 계기로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 인사에서도 지역 인재의 고른 기용을 통한 탕평인사와 대통합의 진정성을 기대한다. "호남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실천 의지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광주시, '여수 예울마루 효과' 배워라

한동안 문화불모지로 불렸던 인구 25만 명의 여수시가 문화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문화공연이 풍성한 수도권에서도 접하기 힘든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과 뮤지컬 '맘마미아' 등 대형공연이 여수시 망마산 기슭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인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GS칼텍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110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예울마루(지상 7층, 건축 연면적 2만4945㎡)는 지난 5월12일 개관 이후 여수시의 문화지형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 사실, 예울마루가 개관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수는 변변한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없어 수준 높은 볼거리들을 유치하기가 힘들었다.

명품 공연들을 관람하기 위해선 광주나 서울로 가야만 했다. 그렇다 보니 문화를 가까이 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져 휴일에는 영화감상으로 보내는 시민들이 많았다.

하지만 예울마루는 개관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등 문화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총 60여 편의 전시와 공연이 열렸고, 7만5000여 명의 관객들이 다녀갔다.

예울마루의 성공은 무엇보다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적 수준의 아트센터는 고사하고, 개별 장르에 맞는 전용공연장 하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공연장인 광주문예회관은 새로운 관객 창출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 많은 아트센터들이 다양한 기획공연과 아카데미로 애호가를 양성하는 데 반해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물론 아트센터나 전용공연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지자체엔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예산 타령하며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순 없다. 여수시의 사례처럼 기업의 메세나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광주시가 '예울마루효과'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다.

종교칼럼

스님이 카페를 한다

일담

스님이 카페를 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의 발단은 이렇다. 강진에 아트홀이 만들어지면서 큐레이터를 하시는 분이 내게 제안을 했다. 아트홀에 찻집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멀리서 수입해온 커피나 음료수를 파는 것보다는 강진에서 생산되는 전통차를 팔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평생을 차를 만들면서 한국 녹차문화의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은사스님, 다산과 아암, 초의선사 등 우리나라 차 문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백련사, 이런 곳에서 찻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련사에는 이미 '만경다설'(萬景茶說)이라는 찻집이 있다. 구강포 바다와 오래된 백일홍 나무가 어우러져 풍경이 아름다운 찻집이다. 사찰에 이미 찻집이 있는데 시중에 찻집을 더 만든다는 것은 나로서도 꽤 부담가는 일이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

그런데 그 일이 실마리가 되어서 도시에 우후죽순 생기는 카페를 눈여겨보게 됐다. 상권이 발달한 곳에는 한 블록에 하나씩 커피전문점이 생기고 몇 년 사이에 한국은 커피천국이 된 것 같다. 심하게는 참선 수행하는 선방에서도 스님들이 차보다는 커피를 마신다는 말이 들려온다. 커피가 나쁜 것은 아니다. 연하게 마시는 커피 한잔의 향기는 산사에서도 가끔씩 즐기는 여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사라져가는 전통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 온 차 문화에 대해 소홀해지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우선 음료를 섭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녹차를 마시는 행위에는 천년을 넘게 이어오는 다인(茶人)들의 문화와 정신을 만난다는 의미도 있다. 멀리 고려시대는 제치고도 조선의 다산과 아암의 우정에는 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추사와 초의의 사귐은 어떠한가? 차 마시는 일상을 선(禪)의 경지로 노래한 초의의 시를 읽다 보면 내 삶이 더 풍부해진다.

'맑은 달 불러 촛불로 삼고 아울러 벗으로 하여/ 하얀 구름 방석 깔고 병풍으로 둘러치니/ 대숲 스치는 소리와 소나무 파도치는 소리 서늘하게 잦아들면/ 맑고 청아한 마음속 저 끝까지 가득 성성(惺惺)하네/ 오직 흰 구름과 밝은 달빛만 손님으로 맞음에/ 도인의 찻자리 이보다 더함이 있으리'(초의스님)

미국에 살 때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한국식 전통차를 마실 때였다. 참선이 끝나고 둘러앉아 백자 다관에 한국에서 가져온 차를 우려 나눠 마시면 그것 또한 선수행의 연장이 된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그런 차 문화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다.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뭐라고 할까?

한국의 커피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그 흔한 자판기 커피와 다방 커피에서 풍미가 강한 스타벅스 커피, 그리고 고급 핸드드립 커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대중과 만나서 소통하고 변화를 거듭해 왔다. 반면에 한국의 전통차는 아직까지도 옛 이미지에서 탈피를 못 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가루녹차를 활용한 녹차음료와 녹차디저트가 쉽고 다양하게 대중을 만난다. 우리의 전통차도 대중들과의 소통방식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차는 고급문화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쉽게 마시고 즐겨 마시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현대인들과 소통의 방식을 찾는 일은 지금 차 문화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커피전문점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마실거리에 대한 고민도 증가하고 있다. 며칠 전 동네 어르신이 검은콩과 검은깨, 찹쌀로 선식(禪食)을 만들어 오셨다.

또 어떤 분은 마을에서 직접 담근 감식초를 보내오셨다.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매년 만들어 보내는데 스님 몫으로 조금 더 만들었다며 조그마한 단지에 담아 오셨다. 아침마다 선식과 감식초를 마시면서 이런 음료를 도시로 공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청정한 남도에서 친환경으로 만든 좋은 마실 거리를 직접 찻집에 공급하는 것 또한 좋은 아이템이다. 어제 온비드에서 카페 공찰에 참가했다. 오랜 고민과 성찰 속에 차문화공간에 대한 일을 수행으로 삼아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에서다. 낙찰을 받게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우리 고유의 차와 마실거리를 통해 시골과 도시가 소통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 스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백련사 총무 스님〉

기고

장애인 사각지대와 최소한의 인권

이영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총 장애인 수는 251만여 명이다. 그 중 1급 중증장애인이 21만 명이며, 이들은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을 빌려야만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장애계에서는 실제 중증장애인의 수를 21만이 아닌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예전에는 시설 수용이나 휠체어나 의족 등 장비를 보급하는데 그쳤으나 이제는 점점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장애인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된 제도가 '활동보조서비스'이다. 헌데, 이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만 서비스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활동능력 수준, 생활형편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

지난 9월, 근육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가 빠져 세상을 떠난 A씨(33세)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서비스 시간이 단축되어 하루 세 시간 정도밖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혼자 남아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호흡기가 빠져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이 제도의 비상식적인 점은 또 있다. 혼자 사는 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어도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로 판단하여 서비스 지원을 축소시킨다는 사실이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

1급 중증장애인이었던 장애운동가 B씨(34세)도 활동보조인이 없는 새벽 시간에 불이 나서 목숨을 잃었다. 또한 얼마 전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뇌병변장애를 가진 남동생을 보호하려던 누나 박지우양(13세)이 불길 속에서 의식을 잃고 끝내 세상을 떠난 사건도 있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 상한제를 폐지하라며 오늘도 지하도 등에서 절규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을 빌리지 않으면 일상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이들이기에 더욱 절박하게 더욱 필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사지육신이 멀쩡한 일반인들이 어찌 그들의 심정과 상황을 짐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장애가정이 기초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극빈층이면서도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23년 동안 얼굴 한번 본적 없는 법적으로만 부모인 사람의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이 박탈되어 하루아침에 정부의 지원이 끊기기도 한다.

최근 생활고 때문에 인천의 모녀가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부양을 전혀 하지 못하는 처지였는데도 성년인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대구에 살았던 모녀 역시 1년간 기초 수급비를 받아 왔지만 국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또한 얼마 전 고흥에서 한 달 2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자던 할머니와 손자가 변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극빈층의 장애인들은 물론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부양의무제도는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마땅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에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최고의 화두로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사회적 약자나 노인 등 소수자들이 누구나 제약 없이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치하는 이들은 도덕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권, 이것들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꾸려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배려와 존중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無等鼓

라도네이션

"나는 전라도 출신/ 감히 누가 나를 깔보냔 말여/ 어이 홍어들 매도하지 말어…서울 대전 대구 부산 똑똑히 들어/ 난 언제든 준비돼 있어/ 더 크게 외칠거야 라도네이션."

아프리카TV의 비디오자키인 릴렉스가 부른 '라도네이션'이란 노래의 가사다. 랩으로 부른 이 노래는 전라도 사람에 대한 타 지역 사람들의 편견과 폄하에 대한 자기 변론이자 반항적인 외침이다.

"나는 지역감정 그 딴 것 몰라/ 이 좁은 나라 두쪽으로 단절한 것도 모자라/ 얼마나 더 편을 갈라야 시원하겠냐."

그러면서 뿌리 깊은 지역감정에 대한 피해 의식을 드러내고 치유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라도네이션(Rado Nation)은 전라도 네이션의 줄인 말로 '전라도 공화국'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래퍼 또한 전라도 출신이다. 라도네이션이 대선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로 전라도 10대와 20대들이 이 노래를 즐겨 들으면서 대선 패배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정읍 출신 20살 래퍼의 자작곡인 라도네이션은 지난 9월 인터넷을 통해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알려졌으나 대선 이후 전라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상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선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전라도만 야당 후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을 두고 일부 과격한 타 지역 사람들이 이번에 전라도를 따로 떼어내 전라도 공화국을 만들어 버리자라고 한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광주에 사는 한 40대 가장은 중학교 2학년생 딸이 라도네이션을 들으면서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전라도 사람에 대한 편견을 통쾌하게 질타한 노래에 공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녀들까지 지역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때문이다.

'호남만의 몰표'라는 이번 대선 결과가 전라도 청소년들에게까지 아픈 상처를 남긴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장필수 사회부 2팀장 bungy@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